

# 국무조정실

우110-760 /종로구 세종로77-6 국무조정실 /전화 3703-3808 (행)3808 /전송 723-1966  
조사심의관실 과 장 남 세 현 서기관 박 계 옥

문서번호 국무심평16060- 59

시행일자 2001. 2. 7.( )

경유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보존기간		국무조정실장	국무총리
공개여부		하	남
조정관	유정석		
국장	남기종		
과장	남세현		
기안자	박계옥		협조
심사자	식리석	심사일	2001. 2/7

제목 2001년도 국가기강 확립대책에 관한 지시(국무총리지시 2001- 8 호)

1. 그동안 정부는 각급 기관별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비위공직자를 적발·처벌하고,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도덕적 해이 등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.

그러나, 아직도 일선기관 등에 부조리가 남아 있고 우리사회 일부에 집단이기주의 등 법 경시풍조가 잔존하고 있어 부패방지와 국가기강확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2.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, 법질서와 원칙이 바로 선 선진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사항을 지시하오니 붙임 「2001년도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지침」 및 「부정부패 척결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지침」에 의거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가. 공직기강 확립대책 관련

- 1)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등을 통해 정책투명성을 제고하고, 일선현장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
- 2)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추진성과에 입각한 인사평정, 개혁적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 등 인사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것



- 3)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
- 4) 지위고하를 막론한 감찰활동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문제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특별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

#### 나. 사회질서 확립대책 관련

- 1) 법의 「집행력」 확보를 위해 각급 기관별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, 적극적인 홍보 및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
- 2)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 「한국방문의 해」, 2002년 「월드컵 대회」를 선진시민사회로 진입하는 일대 계기로 삼아 시민들과 협조하여 친절·질서·청결운동을 전개할 것

#### 다. 부정부패척결관련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관련

- 1) 각 부·처·청, 지방자치단체는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「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기획단」을 설치하여, 기관별로 부패실태 및 원인 등을 포함하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
- 2) 각 부·처·청은 대통령 주재 보고회의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보고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

3. 국가기강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의 성패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, 각급 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, 전직원이 이에 자발적·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) 2001년도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지침  
2) 부정부패 척결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 지침. 끝.

## 국 무 총 리

수신처 : 가 23~86, 나 01~18, 다 01~18 (75개 기관)



<별첨1>

# 2001年度 國家紀綱確立對策 推進指針

---

2001. 2. 7

國 務 調 整 室



# 目 次

<b>1. 概 要 .....</b>	<b>1</b>
<b>2. 公職紀綱 確立對策 推進 .....</b>	<b>2</b>
2.1 評價 및 與件診斷 .....	2
2.2 目 標 .....	3
2.3 基本方向 .....	3
2.4 對策方案 .....	4
2.5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 改善 .....	9
2.6 措置計劃 .....	10
<b>3. 社會秩序 確立對策 推進 .....</b>	<b>20</b>
3.1 2000年度 社會秩序 確立對策 推進實績 評價 ...	20
3.2 2001年 推進 基本方向 .....	21
3.3 推進課題 .....	22
3.4 推進體系 .....	25
3.5 推進戰略 .....	26
3.6 支援 및 評價 .....	28
3.7 措置事項 .....	29





## 1. 概 要

### □ 2001年度 國家紀綱確立對策의 必要性

- 국정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공직기강과 사회질서 등 국가기강 확립이 선결요건임
- 경기침체 등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하에서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
- 2002년 선거 등을 앞두고 우려되는 사회분위기 이완의 예방 및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질서 확립

### □ 推進戰略

- 국가기강 확립은 공직사회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국정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
- 법과 질서,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민주시민사회 정착
- 시민의 자율적 실천과 개혁주체인 공직자들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 민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추진

### □ 推進計劃 및 日程

- 계획수립
  - 각 부처 및 일선기관은 본 지침을 토대로 기능별,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3월부터 각 기관장의 진두지휘 하에 본격 추진
- 평 가
  - 월별점검,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연말 기관평가에 반영

## 2. 公職紀綱確立對策 推進

### 2.1 評價 및 與件診斷

#### □ 지난 3年間の 評價

- 「국민의 정부」 출범이후 지난 3년간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찰 활동 등을 통하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적발·처벌을 강화하고,
  - 각급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금품·선물·향응 수수 근절, 인사평정시 다면평가제 및 목표관리제 실시 등 공직문화 쇄신방안을 추진하여 공직사회가 점차 투명하게 변화
- 그러나, 각급 기관의 2000년도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실태를 점검·평가한 결과
  - 아직도 일선기관의 부조리는 근절되지 않고, 일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행태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
  - 또한, 일부 고위공직자, 정부산하단체·공기업 간부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은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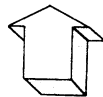
#### □ 與件診斷

- 금년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국정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, G-10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어느때 보다 시급
  -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,
  -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공직문화 등을 혁신할 필요

## 2.2 目 標

### 目 標

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깨끗한 政府 具現  
道德性和 專門性を 갖춘 일하는 公職風土 造成



- ▷ 國政改革 完遂 및 安定的인 國政運營 뒷받침
- ▷ 機關長 責任下에 嚴正하고 自律的인 紀綱確立
- ▷ 知識情報社會의 패러다임에 맞는 生産的인 公職文化 造成

## 2.3 基本方向

- ◇ 公職社會의 活力을 圖謀하여 열심히 일하는 勞圍氣 造成
  - 인사운영시스템 개선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
- ◇ 需要者 중심의 行政서비스 제공을 통한 國民滿足度 提高
  -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, 고객만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
- ◇ 過去의 不合理한 慣行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公職文化 造成
  - 각종 정보화·리더쉽양성 등 선진공직문화에 걸맞는 의식 개선과 능력발전 프로그램 확대

## 2.4 對策方案

### ① 國政改革課題 推進 徹底

- 각급 기관은 國政課題(100대과제 700개 실천과제) 소관 사항을 적극 추진
  - 기관간 支援協力體制를 강화하여 효율적 추진 도모
- 특히, 기업·금융·공공·노동 등 4大部門 12大 改革課題에 대해서는 금년 2月말까지 完結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
  - 構造調整 推進實態에 대한 常時 點檢體制를 強化하고, 추진이 부진한 機關 및 關聯公務員에 대한 責任을 糾明

### ② 需要者 중심의 行政文化 造成

- 各種 政策決定 및 執行過程에 利害當事者 參與 擴大
  - 정책결정을 위한 各種 委員會에 各界各層의 참여 확대
  - 찬반양론이 있는 주요 정책결정시 輿論調査 實施
  - 정책집행에 대한 監査·評價시 시민참여 확대
- 國民에게 다가서는 民願行政 具現
  - 모든 인·허가업무에 인터넷 민원처리를 확대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편의 도모
  - 우수인력을 민원상담실에 배치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질 제고
  - 민원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원처리 부진사유 분석 및 대책 강구
  - 일선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민원업무 처리

○ 정책결정 및 집행관련 情報公開 擴大

- 정보공개요구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정책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
- 정보공개신청이 있는 경우, 정보공개관련법의 예외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

○ 生産的 公職文化 造成

- 각 부처가 自律的으로 금품·향응수수 관행, 부처내 할거주의 등을 根絶하기 위해 行動綱領 제정·시행 등의 조치 강구
- 각종 정보화·리더쉽 양성·어학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능력발전 프로그램 확대·지원
- 특히,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경찰·교사·지방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기회 확대 추진

### ③ 일하는 방식의 劃期的 改善

○ 積極的이고 創意的인 業務遂行 姿勢 堅持

- 선례답습 관행 등으로 인해 선례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업무수행태도 탈피
- 공무원들이 사후감사 등을 의식한 책임회피성 행태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업무추진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

例) · 각 부처내 법령·규정 유권해석위원회 설치

· 감사기관의 감사방향 사전공개 및 감사결과 사후공개 제도화 등

- 機關別로 職務分析을 통하여 실정에 맞게 집중근무시간제, 선택적근무시간제 등 탄력적인 근무방식 도입 검토
  - ▶ 집중근무시간제 : 하루중에 특정시간대를 지정하여 회의·전화응대 등이 없이 집중적으로 소관업무를 처리
  - ▶ 선택적근무시간제 : 공동근무시간(例 : 하절기 10:00~16:00)이외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
- 근무시간중 주식투자 등 私的業務를 자제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公私區分 철저 및 密度있는 勤務慣行 정착
- 不合理한 공직내부 規制撤廢, 대기성 야간근무지양, 불요불급한 각종 회의자제 등 不合理한 勤務行態 개선
- 내각의 팀제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부처간 水平的 政策協議 強化
  - 관련분야 정책협의회를 수시개최, 사전실무조정 강화
-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대응계획 (Contingency Plan) 수립·추진

#### **[4] 人事運營 시스템 改善**

- 公正한 人事評價體制 構築
  - 보직·승진 등 인사청탁 배제, 자기업무실적카드 기록 의무화 등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성과에 입각한 인사평정 실시
  - 부처별 인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등 공정성을 제고하고, 다면평가제 및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확대
  -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常時 人事體制 확립 및 학연·지연 등에 의한 緣故主義 人事根絶

- 民·官間, 部處間 人事交流 活性化
  - 공직자의 다양한 경험축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사평정시 외부기관 근무경력자 우대
  - ※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민간기업,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제도화 방안 적극 검토
  -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처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여 부처간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처이기주의 타파
- 일부 年功序列로 運營되는 目標管理制를 成果와 寄與度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補完

## **[5] 特別監察活動의 持續的 展開**

- 地位高下를 莫論한 철저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國民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문제공직자를 公職에서 排除
- 腐敗脆弱分野, 公企業·傘下團體 등에 대한 집중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非理行爲 拔本塞源
- 各級 機關長은 감사부서에 清廉하고 有能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正當性を 확보하고, 강도 높은 감찰활동 전개
- 地方不條理에 대한 監察活動 強化
  - 대민접촉이 많은 일선기관의 비리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
  -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줄서기, 위법·부당한 선심성 예산낭비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

## Ⅵ 公職者에 대한 責任糾明 強化

- 推進過程에서 問題點이 表出된 각종 정책이나 제도운영에 대한 實態點檢 強化
  - 문제있는 정책담당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공직자들의 責任意識 提高
- 不法·不當한 行政處分을 한 公職者에 대한 責任 強化
  - 법령·규정·지침 등의 적용과정에서 재량권을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상권 행사 등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
- ※ 2000년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인용율이 시·도는 39.5%, 중앙행정기관은 21.5%로 높은 수준이고, 특히 일부 시·도(대구시, 경북도)는 60%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임
- 업무 부당처리, 무사안일, 책임전가행위, 직무유기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關聯者 嚴重問責
  - 다만, 積極的인 業務遂行中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, 불가피한 법규적용 오류 등은 과감히 불문처리
- 公職紀綱確立 評價體制 強化
  - 각급 기관장의 推進意志, 制度改善努力, 監察活動實績 등 주요 추진상황을 指標化하여 半期別로 점검·평가



## 2.5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 改善

### ① 「行政監査規程」의 徹底한 履行

- 지정된 종합감사주기의 이행,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 (NAIS)의 적극 활용으로 과다 및 중복감사 방지
  - 각급 기관은 과다·중복감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
- \* 경기도는 2000년도에 산하 시·군에 대하여 2,278회, 3,209일을 감사 또는 지도방문(용인시의 경우 총 120회, 207일 수감)
- 종합·부분감사는 반드시 사전에 통제기관에 의한 철저한 조정·통제를 실시하는 등 감사계획의 통제 강화
- 감사생략제 및 계층제 감사의 철저한 이행
- 합동감사 활용으로 감사효율성 제고 및 수감부담 경감

### ② 指導訪問의 調整·統制 強化

- 불요불급한 지도방문 억제
  - E-mail·FAX·전화·문서에 의한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대체가능한 지도방문 금지
- 중앙행정기관은 「행정감사규정」 제29조의2에 의해 각 기관에 설치된 「지도방문조정심의회」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실시
  - 시·도 및 시·도교육청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실시
  - 시·군·구 및 시·군·구교육청은 기관장 책임하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엄격히 통제
- 지도방문 관련기록부 관리 철저

## 2.6 行政 措置事項

### 1) 2001年度 公職紀綱確立對策 樹立・施行

-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「2001년도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계획」을 마련하여 시행

※ 공직기강확립 관련 기 시행한 지침은 동 지침으로 같음

-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「2001년도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」을 분기 종료 10일내에 국무조정실(조사심의관실)에 보고(제출양식은 별첨1)

※ 감찰활동실적은 매월보고

### 2) 2001年度 行政監査計劃 樹立・施行

-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2001년도 행정감사계획」을 수립하여 2001.2.15(목)까지 국무조정실(조사심의관실)에 제출(제출양식은 별첨2)

※ 「행정감사규정(대통령령)」에 의한 “2001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 방침”은 동 지침(Ⅱ. 5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의 운영개선)으로 같음

-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2001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결과」를 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 국무조정실(조사심의관실)에 보고(제출양식은 별첨3)

### 3) 特別監察活動의 持續的 展開

- 기 추진중인 자체감찰계획에 따른 점검활동 철저 시행
- 각급 기관은 부패취약 분야 및 시기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
- 사법집행기관은 각급 기관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계획 수립·실시

### 4) 推進狀況 點檢·管理

- 국무조정실은 각급 기관의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·평가
-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·평가하는 등 관리 강화

## 5) 機關別 措置事項(例示)

推進部處	措 置 事 項	협 조
전부처 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01년도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계획 수립·시행</li> <li>○ 국정개혁과제 적극 추진</li> <li>○ 각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·시행(여론조사 실시 등)</li> <li>○ 모든 인·허가업무에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</li> <li>○ 정보공개 확대</li> <li>○ 자율적으로 공직자행동강령 제정·시행</li> <li>○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·시행</li> <li>○ 인사청탁 배제, 다면평가제 확대 등 인사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마련·시행</li> <li>○ 특별감찰활동 지속 전개</li> <li>○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있는 공직자에 대한 책임규명 강화</li> <li>○ 2001년도 행정감사계획 수립·시행</li> </ul>	
국무조정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01년도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지침 시달</li> <li>○ 각급 기관에 대한 집중감찰활동 실시</li> <li>○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상황 상시 점검·평가</li> </ul>	전부처
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상황 관리 철저</li> <li>○ 자기업무실적 기록 의무화, 민관간·부처간 인사 교류활성화 방안 마련 등 인사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·시행</li> <li>○ 지방부조리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</li> </ul>	중앙인사위원회
교육인적 자 원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교육청 부조리 척결방안 마련·시행</li> </ul>	
노 동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동부문 국정개혁 추진상황 관리 철저</li> </ul>	
기획예산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부문 국정개혁 추진상황 관리 철저</li> </ul>	
법 무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부패척결방안 마련·시행</li> </ul>	
검 찰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체 감찰활동 강화</li> </ul>	
경 찰 청		

## 6) 提出樣式

### <별첨 양식1>

※ 향후 실적제출은 아래양식으로 통일

## 2001년도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

### I. 종합평가

※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기관 자체 평가

### II. 과제별 추진실적

#### 1. 과제별 추진실적

분야별 과제명 및 추진계획 개요(例示)	추진실적	비고
<수요자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> ○		
<일하는 방식의 개선> ○		
<인사운영시스템 개선> ○		
<부정·비리 예방활동> ○		
<감찰활동> ○		
<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> ○		
<공직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> ○		
<기타> ○		

※ 과제명은 「2001년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추진지침」에 따라 각 부·처·청에서 추진하는 과제

※ 보고서 작성은 위 서식 순서대로 작성 요망

2. 감찰활동실적(취약분야 및 취약시기 감찰실적 포함)

<표1> 감찰활동실적 총괄

감찰 기간 ①	감찰 분야 ②	대상 기관명 ③	대상 기관수 ④	감사인원 (연인원) ⑤	적발유형별 인원							
					부정부패		공직기강 해이					
					금품·향응 수수	공금 횡령·유용	무사 안일	업무부 당처리	복무규 정위배	품위 손상	보안관 리소홀	기타
계	계											

※ 작성요령

- ① 감찰기간 : 연말연시·명절·휴가시기 등 부조리 유발 및 근무기강 해이 우려가 있는 취약시기와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찰실시한 기간  
(예:8.1~8.15)
- ② 감찰분야 : 중점감찰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
- ③ 대상기관명 : 피감찰기관 중 대표적 기관 2~3개 기관명
- ⑤ 감사인원(연인원) : 감사실시한 인원 × 日數

<표2> 분야별·직급별 감찰활동실적(금월 및 누계실적 별지로 각각 작성)

구 분		계	본 부 (청)	소속기관	산하단체
합 계	계				
	3급이상				
	4~5급				
	6급이하				
	교 육 직				
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
부 정 부 패	금품 향응 수수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	공금 횡령 유용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공 직 기 강 해 이	무사 안일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	업무 부당 처리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	복무 규정 위배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	품위 손상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	보안 관리 소홀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	기 타	계			
		3급이상			
		4~5급			
		6급이하			
		교 육 직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

3. 징계조치실적(금월 및 누계실적 별지로 각각 작성)

구 분		계	징계요구			기 타			형사 고발
			소 계	중징계 (파면,해임)	경징계 (정직,감봉,견책)	소 계	연 직	주의·경고	
합 계	계								
	3급이상								
	4~5급								
	6급이하								
	교 육 직								
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	
과 장 부 과 장	금품 향응 수수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	공금 횡령 유용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공 직 기 강 해 이	무사 안일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	업무 부당 처리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	복무 규정 위배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	품위 손상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	보안 관리 소홀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	기 타	계							
		3급이상							
		4~5급							
		6급이하							
		교 육 직							
		산하 단체	임 원 직 원						

※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. 기타 유형은 적발·조치사례를 기준으로 양식하단에 주요유형을 열거 정리

※ 참고 : 직급분류기준 : 3급이상≒경무관이상≒소방감이상≒대령이상, 4~5급≒경정이상≒소방령이상≒중령이상, 6급이하≒경감이하≒소방경이하≒중위이하



<별첨양식 2>

## 2001년도 행정감사계획

(○ ○ 부)

☐ **종 합**

구분	감사 종류별(횟수)				대상 기관별(횟수)					감사 연인원 (명)	총감사 일수(일)
	계	종합 감사	부분 감사	기강 감사	계	본부	소속 기관	자치 단체	기타		
합계											

☐ **감사내역**

연번	감사 시기	감사 기간	감사 구분	대상 기관	감사 인원	감사사항	비 고

< 작성요령 >

- 감사내역 :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
- 감사시기 : “○월중”으로 기재
- 감사기간 : ○일간으로 기재
- 감사구분 :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
- 감사사항 : 구체적으로 기재 (예) 재산관리, 예산회계, 조세분야 등
-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

<별첨양식 3>

## 2001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 결과

(○ ○ 부)

### 1. 감사실시 상황

감사 대상 종류	합 계						본부·소속기관						지방자치단체					
	(당해)년		(전) 년		증 감		(당해)년		(전) 년		증 감		(당해)년		(전) 년		증 감	
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
계																		
종합감사																		
부분감사																		
기강감사																		
○ 감사 종류별, 대상별(본부·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) 증감사유 설명 (전년대비)																		

### < 작성요령 >

※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

### 2. 감사 실시상황(기관전체 종합)

※ 종전 방식과 동일

구 분 수감기관별			총 감사 대상기관수	자 체 감 사								외부감사	
				계		종합감사		부분감사		기강감사			
			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
총 계													
중앙 행정 기관	중앙(본부)												
	소속 기관	계											
		1 차											
		2 차											
		3 차											
지방 자치 단체	시·도 및 교위												
	소속 기관	계											
		1 차											
		2 차											
		3 차											

### 3. 감사결과 조치내용

신분상 조치				재정상 조치	
징계		경고 등		건수	금액
건수	인원	건수	인원		

### 4. 중앙행정기관의 지도방문 실시상황

구분 피방문기관	(당해) 년		(전) 년		증 감		심의회 개최횟수
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횟수	기관수	
계							
지방자치단체							
소속기관							
타행정기관							
※ 피방문기관별 지도방문 실시의 증감사유(전년도 대비)							

### 3. 社會秩序 確立對策 推進

#### 3.1 2000年度 社會秩序 確立對策 推進實績 評價

○ 개혁완수를 통한 國家競爭力 강화를 위하여는 國家法秩序와 公權力 確立이 가장 중요

- 社會秩序確立對策 4대분야 10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민·관합동으로 遵法文化運動을 추진
  - 차례지키기 등 일부 공중질서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싹트고 있으나, 아직 본격 점화되지 않고 있음
- 우리사회에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集團利己主義 등에 따른 법 경시풍토 확산
  - 集團利益 관철을 위한 민원성 집회·시위 급증
    - \* 서울특별시의 경우 '99년대비 216%증가(전체4.1%증가)
- 개혁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의 관계가 힘대결 구도로 비치는 등 公權力 信賴問題 심각
  - 정책집행현장에서의 행정 무기력화 우려 증대
- 모든 언론매체와 사회적 관심도 금년도에 法秩序 確立의 중요성을 지적
- 이러한 현상에 대한 原因은
  -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 및 점검 부족
  - 법집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홍보와 일관성 있는 추진 부족
  - 합법행위의 보장 및 보호와 위법에 대한 엄정한 조치 미흡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

## 3.2 2001年度 推進 基本方向

### □ 推進與件

- 그동안 추진해 온 『4대개혁』을 마무리하고 경제·사회의 안정을 회복하여 『21세기 세계중심국가』 진입을 위한 재도약에 國家力量을 결집하고
- 금년도 『한국방문의 해』, 2002년 『월드컵대회』를 눈앞에 두고 있어 民主市民秩序 확립이 시급한 시점

### □ 推進目標

- 國家紀綱 차원에서 엄정한 社會 法秩序 확립
- 시민질서와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汎國民 運動 정착

### □ 基本方向

- 부처별 실천과제중 소수의 『戰略 課題』를 선정하여, 집중 추진
- 정부내 推進 機構를 보강 또는 신설하여 強化된 體系를 구축
- 적발보다 豫防原則下에 정부기관, 시민단체·기업체·언론 등과 연계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
- 전 정부기관이 소관분야별로 추진하고, 기관별 自體點檢과 綜合評價體系 확립

### 3.3 推進課題

#### □ 選定基準

- 4大分野別 實踐課題 선정
    - 2000년부터 추진중인 100개 실천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12개 주요 부처별 실천과제를 선정
    - 실천과제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『전략과제』 10개내외 선정
  - 기타 중앙행정기관도 상·하반기 각1개씩 선정
    -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친절·질서·청결운동 전개를 위한 과제 선정
- \*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자부가 조치

#### □ 分野別 課題(主要例示)

##### (1) 基礎秩序

##### ① 交通秩序 確立(경찰청)

- 비전과 목표설정
  - 2001년 목표와 계획, 중장기 목표·계획
- 7대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(음주, 난폭, 폭주, 무면허, 중앙선침범, 신호위반, 과속)
- 택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

## ② 公衆秩序 確立(행자부, 지자체, 경찰청)

- 차레지키기(한줄로서기, 에스컬레이터 한쪽으로 타기)운동 추진
- 불법간판·광고물 중점정비 등 거리질서 확립
-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행위 단속

## (2) 國民健康 保護

### ① 環境汚染行爲 根絶(환경부)

-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 집중 단속
  - 4대강 환경감시단 역할 강화
- 환경오염 손해배상 강화 등 환경범죄 퇴치를 위한 제도개선

### ② 不良食品·醫藥品 流通 根絶(식약청, 법무부)

- 식품안전관리 기반확충,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, 마약류 대처 강화

## (3) 靑少年保護

### ① 靑少年 有害環境 淨化(교육부, 청보위, 경찰청)

-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화 및 정화구역 관리, 풍속불법 영업 특별 단속

### ② 靑少年 暴力 및 性脫線 防止(법무부, 교육부, 청보위, 경찰청)

- 학교폭력 예방·근절활동 강화, 심층추적 수사활동 전개, 청소년 성범죄 및 건전 성문화 조성

#### (4) 經濟秩序

##### ① 公正去來 秩序 確立(공정거래위원회)

- 전자거래상의 소비자 보호, 담합행위 근절, 중소기업체의 권익침해행위 엄단

##### ② 租稅脫漏 防止(국세청, 관세청)

-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, 불법 농수축산물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

##### ③ 株式去來秩序 定着(금융감독위원회)

- 금융회사의 경영선진화 유도, 주식조작 등 문란행위 근절

#### (5) 실천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法秩序 및 公權力 확립(법무부, 전중앙행정기관, 지자체)

- 범국민 준법운동 지속 추진
  - 기관별 특성에 따라 1기관 1실천운동 전개
    - \* 대전시의 경우 민관합동 『범시민 준법질서 다짐대회』 개최(1.31)
  - 국민편의를 위한 『개선대상법령·제도신고제』활성화
    - \* 법무부 주관, 각부처 협조(Task-force팀 등 구성)
- 노사문제 등에 있어 합법보장·불법필벌 원칙하에 『집단행동질서』 확립
  - 사전예방 강화 및 불법행동 민·형사상 책임 철저추궁
- 공권력 침해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
- 가칭 『집회시위현장 시민참관단』 운영 추진
  - 폭력시위 감시, 경찰의 과잉진압 등 논란소지 차단



### 3.4 推進體系

#### □ 國務總理 主宰『國家紀綱 確立 關係長官會議』운영

- 국가기강확립대책 분야별 관계장관 회의 개최(법무부장관 주재)

#### □ 『社會秩序確立對策 點檢評價團』운영

- 2000년도에 운영하던 『사회질서확립대책추진민관협의회』를 點檢 및 評價團으로 改編·운영(국무조정실)
  - 민간위원 확대보강 및 심의기능 부여
- 각부처는 『社會秩序 確立 實務對策班』운영 활성화(각부처)
  - 관련 시민단체, 기업체 등 시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 대폭 확대
  -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점검·평가 기능 강화

#### □ 지역별로 ‘社會秩序 確立 協議體’ 구성

- 분야별로 專門化된 『合同團束班』운영 강화
  - 분야별 단속기능의 체계적 연계를 위하여 지역별 협의체 운영

#### □ 현장집행의 기동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가칭『特別機動隊(○○○기동대)』를 결성(경찰청)

- 시·도별 경찰병력(기동대, 방순대, 기동수사대 등) 2개 중대 활용
  - \* 현재 서울지방 경찰청은 ‘특별기동단속반’(허리케인. 떼제베) 운용
- 지역별 사회질서확립 협의체, 지방자치단체, 일선행정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형성

[참고] 사회질서확립 추진 체계도 : <붙임1>

### 3.5 推進戰略

#### □ 준법생활화를 위한 『民主市民 運動(CITIZEN KOREA 21)』 전개

- 월드컵문민협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가 합동하여 “市民行動綱領 10大 守則” 제정(월드컵문민협 주관)
- 『범국민준법운동』의 일환으로 市民教育 실시(법무부)
  - 대중매체 활용, 전경련 등과 협조하여 기업체 참여 유도
- 民間協力事業(보조금사업)과 연결하여 추진(행자부)
  - \* 2000년 1,490개 단체 1,611개사업 150억원 지급
- 민주시민을 위한 學校教育 추진(교육부)
  - 예절, 질서, 봉사, 토론문화에 관한 단위사업별 장·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
  - 市民參與와 告發精神 등 준법교육 강화
  - 학생캠프 또는 병영훈련 확대방안 강구(국방부 협조)
- 適法하고 正義로운 행위에 대한 선양 강화
  - 『義死傷者』 및 『殉職公務員』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 강구와 신청·보상·실적 등에 대한 집중 홍보
  - \* 의사상자 : 2001년 22명(의사15, 의상7) 18억원 지급
  - \* 순직공무원 : 2000년 293명 71억원 지급
  - 경찰관 등 상해보험 가입확대 및 지원 방안 강구
  - \* 2001. 1월현재 경찰관수의 7.1%가입 → 연말까지 30%

- 사회질서 違反申告 專用電話(○○○번) 개설추진
  - 지역별 『사회질서 확립 협의체』 또는 특별기동대와 연결
  - 신고자 보상제도 확대 및 현실화 방안 강구
- \* 2001. 7월부터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 실시

#### □ 범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行政官廳과 言論機關 連繫 추진 (국정홍보처, 각부처)

- 부처별, 지자체별 1개이상 방송사, 신문사 등과 제휴 또는 연계 방안
- \* 법무부와 매일경제신문사의 범국민준법운동 연계 추진

#### □ 사회질서 추진관련 民·官機構의 네트워크화(e-Community)

- 중앙·지방의 관련 조직, 기구간 on-line, off-line연결 체계 형성(행자부, 정통부 협조)

#### □ 위법행위에 대한 罰則 강화

- 3大 反公益事犯 등 주요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 무기한 持續的인 團束(법무부)
  - 고의·악의적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원칙, 불법이익 박탈 등 실질적 처벌 강화
- 行政秩序罰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(법무부)
  -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부과 등을 위한 입법조치 방안 (행자부 협조)

- 위법행위로 인한 損害賠償 責任 강화방안 마련(해당부처)
  - \* 예시 :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규 등
-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不利益 부여 방안(해당부처)
  - \* 예시 : 자동차 보험료 인상례

#### □ 法律救助公團 機能 擴大 방안 강구(법무부)

- 국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法律的 支援을 위해 사법연수생 활용 또는 『公益 法務官』 임용확대 추진(병무청 협조)

#### □ 가칭 『法執行 支援公團』 설립방안 검토

- 불법간판·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專門執行機能을 專擔하는 법인체(공법인 또는 사법인 형태) 설립 허용 검토

### 3.6 支援 및 評價

#### □ 각종 統計·指數活用 체계 정착(통계청, 행자부, 홍보처, 각부처)

- 사회질서의식에 대한 輿論調査 및 활용도 제고
- 交通統計 標準化 조속 추진
- 지역별 秩序指數 調査 및 공표, 인센티브 부여 방안

## ☐ 評價體系

- 부처별로 機關長 責任下에 매월 自體點檢 및 분기별 自體評價
  - 비용 최소화와 효과극대화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등 실시
  -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문가에 의한 평가체계 구축
- 國務調整室에서 『사회질서확립대책 점검평가단』의 심의를 통한 綜合評價(상·하반기 실시)
  - 추진상황 및 현안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
- 종합평가결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褒賞실시

## 3.7 措置事項

☐ 부처별 實踐課題 및 實行計劃 수립, 국무조정실(심사평가2심의관실)에 제출(2.15까지)

- 부처별 실천과제에는 추진기구·전략 등 체계에 관한 조치필요 사항도 과제로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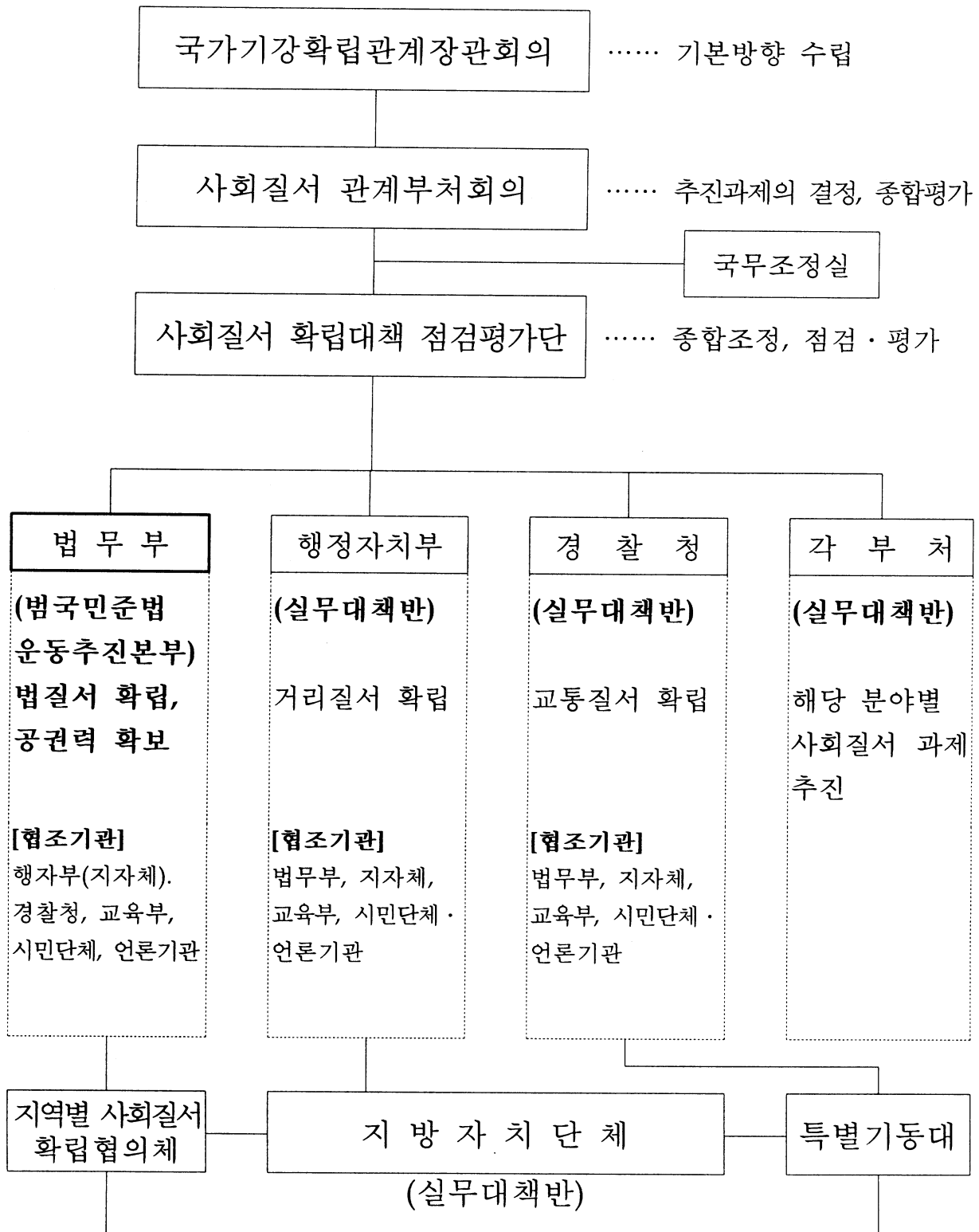
☐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체계 등에 관한 總理訓令 제정(2월말)

☐ 부처별 조치사항 : <붙임2>

※ 「부처별 조치사항 실행계획」 작성요령 : <붙임3>

< 붙임1 >

推 進 體 系 圖



< 붙임2 >

部 處 別 措 置 事 項

推進部處	措 置 事 項	協 調
국무조정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회질서 확립관련 훈령 제정</li> <li>○ 『사회질서확립 점검평가단』 (민관협의회)보강</li> <li>○ e-Community 형성</li> </ul>	법무부 행정자치부 각부처
법 무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부문 과제</li> <li>○ 노사관계 등 관련 『집단행동질서』 확립</li> <li>○ 범국민준법운동의 일환으로 시민교육 실시</li> <li>○ 3대 반공익사범에 대한 무기한 지속 단속</li> <li>○ 과태료 가산금 부과 등 행정질서별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</li> <li>○ 지역별 전문화된 『합동단속반』 운영 강화 방안</li> <li>○ 법률구조공단 기능 확대 방안</li> </ul>	행자부 각부처
행 자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간협력사업(보조금사업) 연계 방안</li> <li>○ 공중질서 확립 부문 과제</li> <li>○ 지역별 질서 지수 개발·적용</li> <li>○ 지역별 가칭 『법집행 지원공단』 설립방안 검토</li> <li>○ 순직공무원 지원강화 방안</li> <li>○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, 추진상황 및 협조사항 점검</li> </ul>	지자체 경찰청
경 찰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칭 지역별 『특별기동대』 결성</li> <li>○ 교통통계 표준화</li> <li>○ 경찰관 상해보험 가입 확대방안</li> <li>○ 교통질서 확립 부문 과제</li> <li>○ 청소년보호 부문 과제</li> <li>○ 공중질서확립 부문 과제</li> </ul>	교육부 문광부 청보위 정통부 예산처
교 육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주시민을 위한 학교교육(CK21) 추진계획</li> <li>○ 청소년보호 부문 과제</li> </ul>	교육청 국방부 경찰청
청 보 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소년보호 부문 과제</li> </ul>	교육부 경찰청
환 경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오염 행위 근절 대책</li> </ul>	지자체

推進部處	措 置 事 項	協 調
식 약 청	○ 부정불량 식품 · 의약품 대책	교육부 법무부 지자체
공 정 위	○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부문 대책	정통부 문광부
국 세 청	○ 조세탈루방지 대책	
관 세 청	○ 조세탈루방지 대책	농림부 해수부 경찰청
금 감 위	○ 주식 등 금융거래질서 정착	
국정홍보처	○ 행정관청과 언론기관 연계 대책 ○ 사회질서 확립 홍보지원 대책	각부처
복 지 부	○ 의사상자예우제도 활성화 대책	
통 계 청	○ 각종 통계 표준화 · 지수 개발 종합지원	해당부처
각 부 처	○ 부처별 소관 사항중 법질서 확립 과제 선정 · 추진(상 · 하반기 각 1개씩) ○ 사회질서 확립 실무대책반 운영활성화(12개부처)	
지 자 체	○ 친절 · 질서 · 청결운동 과제 선정 · 추진	행자부
월드컵문민협	○ 시민행동강령 10대수칙 제정	행자부



< 붙임3 >

『사 회 질 서 확 립 대 책』  
**부처별 조치사항 실행계획 작성요령**

☐ 작성원칙

제	목
---	---

- I. 추진목표
- II. 기본방침
- III. 현황 및 문제점
- IV. 추진체계 및 전략
- V. 추진계획
- VI. 자체평가계획
- VII. 홍보계획
- VIII. 관계부처 협조사항

☐ 작성요령

- “추진체계 및 전략”에는
  - 『사회질서확립실무대책반』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, 기업체 등의 대폭 참여 확대 추진 포함
  - 교육인적자원부, 법무부, 행정자치부, 환경부, 공정거래위원회, 청소년보호위원회, 금융감독위원회, 국세청, 관세청, 경찰청, 식품의약품안전청(12개부처)은 '00년에 구성한 대책반 구성·운영을 보장하고 그 외 부처는 이에 상당한 자체 추진체계 마련

○ “추진계획”에는

- 과제별 추진목표 및 실천계획, 추진일정, 관련기관 및 참여단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

**\* 특히, 추진목표는 최대한 계량적으로 제시**

- 실천과제는 본지침 붙임2의 부처별조치사항 항목을 포함하여, 2000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정하되, 전략과제 선정을 위해 추진해야할 우선순위에 따라 일련번호(예, ①②…)를 부여
- 위 12개부처외의 부처는 당해 부처 업무와 관련된 실천과제를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각1개씩 선정

○ “자체평가계획”에는

- 기관장 책임하에 매월 현장점검 등 자체점검 계획과 분기별 평가계획을 명기(단, 2/4분기-상반기평가, 4/4분기-종합평가)

※ 행자부는 지자체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계획

- 한 부처에 추진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분야별, 부문별로 별도 작성

(예) 경찰청의 경우, 교통질서, 공중질서, 청소년유해환경정화, 청소년 폭력 및 성탈선 방지, 공권력 확립 등은 각 부문별로 실행계획을 별도로 작성

□ 기타 협조사항

- 부처별 『사회질서실무대책반』 구성원 현황 제출(2.10까지)

대책반 직 위	소 속	직급·성명	전화번호	FAX	e-mail	비고

\* 비고란에는 “총괄담당”(실무사무관) 표기

< 별 첨 2 >

不正腐敗 剔抉關聯

# 大統領 指示事項 實踐指針

- Clean Koera 21 -

2001. 2. 7

國 務 調 整 室



# 目 次

1. 腐敗剔抉을 위한 課題 .....	1
2. 腐敗防止對策 推進狀況 .....	2
3. 向後 推進計劃 .....	3
4. 行政 措置事項 .....	5



## 大統領 指示 말씀('01. 1. 9 국무회의)

- 지속적인 부패척결 노력에도 일선 창구의 부조리가 심각하여 외국인 투자 저해요인이 되고 민간부패도 문제
    - 주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부패실태 파악
  - 감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환경·제도개선에 역점
    -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
    - 민원인과의 인적 접촉을 줄이는 방안강구
  - 전자정부 조기 실현으로 투명한 행정 구현
- ▶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사회장관팀에서 부패척결대책 마련

### 1. 腐敗剔抉을 위한 課題

#### ◇ 腐敗發生의 源泉을 遮斷하기 위한 制度改善

-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집행기준을 명확화
- 일선창구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행정투명성 제고
- 금융부조리, 하도급 비리 등 민간부패 방지

#### ◇ 情報公開 擴大 및 電子政府 早期實現

-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정보공개 시스템 강화
- 디지털 행정 확대로 인허가 업무의 대민 접촉기회 차단

#### ◇ 反腐敗 敎育·弘報強化

- 부패를 유발하는 문화·관행·의식 개선

#### ◇ 公職者와 社會指導層 非理에 대한 嚴格한 摘發·處罰

## 2. 「腐敗防止 對策」推進狀況

### 2.1 「1 段階」腐敗防止 對策

#### ◇ 主要對策

- ‘99. 8월부터 腐敗脆弱 分野에 대한 制度改革과 腐敗防止 인프라 構築에 力點을 두고 추진
  - 경찰, 세무, 건설, 건축, 식품, 환경분야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,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70개 제도개선 과제 마련
  -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, 반부패기본법(안) 마련, 시민참여 확대 등 30개 반부패인프라 구축방안 마련

#### ◇ 推進成果

- 制度改善의 확실한 實踐으로 부패가 1년전에 비하여 감소 (78.4%)되고, 부패의 심각성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  -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응답자비율(%) : 40.6(‘99.9) → 78.4(‘00.9)
  -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자비율(%) : 91.9(‘99.9) → 75.6(‘00.9)
-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 신설,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반부패인프라도 내실있게 확충하여 부패방지추진 기반을 구축
  - 다만,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지연으로 고발자보호, 시민감시제도 등의 추진이 미흡



## 2.2 「2 段階」腐敗防止 對策

- 부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'00.6월부터 여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부패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중
  - 지방행정, 교육, 조달, 예산, 사회복지 보조금, 중소기업 정책 자금, 정보공개 등 7個 分野에 대한 研究用役('00. 6 ~11) 結果를 토대로 대책 검토
- 깨끗한 정부구현, 공공부문의 효율성제고, 국민편익 증진에 대책의 목표를 두고
  - 디지털행정 시스템 構築, 行政情報公開 擴大, 執行基準 및 節次의 透明性 提高, 支配構造 改善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

## 3. 向後 推進計劃

### 推進方向

- 현재 추진중인 1, 2단계 부패방지대책이 대통령 지시 사항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므로
  - 이를 토대로 대통령지시사항 실천을 위한 방안을 보완·발전
- 민간분야의 부패문제도 금년 하반기까지 대책을 마련 하여 추진

### 3.1 行政透明性 提高를 위한 制度改革 強力 推進

#### ◇ 大統領 指示事項을 「1, 2 段階對策」에 반영·추진

- 1, 2 단계대책 주관부처는 현 추진상황을 자체평가하고 不振部分을 보완 또는 추가발전시켜 적극 추진
  - 특히, 전자정부 실현, 행정투명성 제고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가대책을 발굴
- 나머지 부처에서도 객관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 유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

#### ◇ 金融部門 등에 대한 「3段階 腐敗防止對策」 마련

- 우리사회 전체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부패척결과 금융·하도급 비리 등 民間部門의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금년 8월까지 마련

### 3.2 反腐敗 敎育·弘報 強化

- 공직자 및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반부패교육 강화
- 각 부처별로 개선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

### 3.3 정확한 腐敗實態 把握을 위한 反腐敗 統計인프라 構築

- 부패자 적발·처벌관련 D/B구축, 청렴도지수 개발
- 주기적으로 분야별 청렴도 지수를 측정·공표

### 3.4 反腐敗 國際協力 強化

- 우리의 반부패노력을 외국에 적극 홍보하여 정부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유도 및 신인도 제고 필요
  - 작년 12월에 서울에서 아태지역 반부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의 반부패 노력 적극 홍보
  - 금년에도 Global Forum(5월), IACC(10월)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부패척결 노력과 성과를 홍보

- 2003년 서울 반부패국제회의 개최 준비
  - 제3차 Global Forum 과 제 11차 IACC 통합개최 추진
  -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「준비기획단」 구성·운영
- TI,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등 국제협력강화

### 3.5 推進狀況의 週期的인 點檢評價

- 각 기관의 부패척결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분기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

## 4. 行政 措置事項

### 4.1 기관별 「깨끗한 政府具現을 위한 行政改革企劃團」 (Clean Korea 21 企劃團) 구성(2. 10일까지)

- 중앙부처·자치단체별로 기획단을 구성, 부패를 유발하기 쉬운 제도·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진사항을 보완
  - 단장은 부기관장으로 하고, 분야별 국·과장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민간전문가도 포함
- 각 부처에서는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국무조정실에 보고
  - 기획단 설치보고는 2.13일까지, 분기별 운영실적은 매분기말로부터 15일까지 보고 (보고양식은 추후별도 시달)

※ 시도는 행정자치부가,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총괄관리

#### 4.2 부처별 행정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혁방안 마련·제출(2 10일까지)

-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: <부록> 참고

#### 4.3 부패실태에 대한 輿論調査(2월 중)

- 부패실태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야별 여론조사 실시(국무조정실,국정홍보처)

#### 4.4 대통령 주제 行政改革 報告會議 개최(2월말 또는 3월초)

- 그간의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보완대책
  - 1, 2단계 「부패방지대책」
  - 공무원·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대책
- ※ 보고회의시 보고대상 부처 및 보고방법은 추후 별도 통보  
(보고대상 이외의 부처는 대통령께 서면보고)

< 부 록 >

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

◇ 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대책 내용

○ 공통 사항

- 부처별로 부패취약분야 진단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 
①전자정부 실현 ②정보공개 확대(예산집행, 인허가 처리과정 등)  
③시민의 감시·고발강화(고발보상도입, 위원회 시민참여 등)  
④민원인 접촉 감소 방안(행정절차 간소화 등) ⑤집행기준의 명확화  
⑥불합리한 규제 철폐 ⑦지도단속 투명화 ⑧민원처리 온라인  
시스템 도입 등 행정 투명성 제고 ⑨반부패의식 제고를 위한  
교육·홍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 제시

○ 1단계 대책 주무부처

- 1단계 대책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리
- 추진중인 과제 (법령개정 등을 통해 형식상으로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성질상 계속 추진을 요하는 과제는 포함)을 대상으로 보다 내실있게 실행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
-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을 위한 추가 대책 발굴

○ 2단계 대책 주무부처

- 산하단체, 대민부서 등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부패실태·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리
- 총리실과 협의·확정한 2단계 대책(안)을 토대로 이를 보완 발전

-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을 위한 추가 대책 발굴
- ※ 이와함께 교육인적자원부는 반부패학교 교육방안을,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구축방안과 시민·공직자 교육방안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
- ※ 국정홍보처는 반부패 홍보방안을, 통계청은 반부패인프라 구축방안을 별도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

#### ○ 나머지 부처

-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및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·정리
- 자체적으로 진단한 부패원인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되, 앞의 공통사항은 반드시 포함

### ◇ 보고서 작성 요령

- 작성 체계 : 서식 1·2·3 참조
- 보고서 분량 : 제한 없음 (가급적 상세히 작성)
- 보고서 편집 : A4 기준
  - 제 목 ( 20p, 신명조, 진하게, 한자 )
  - 중간제목 ( 18p, 신명조, 진하게 , 한자 )
  - 본 문 ( 16p, 신명조, 국한문 혼용 )
  - 여 백 (위쪽19.99, 아래쪽15, 왼쪽25, 오른쪽25, 머리말19.99, 꼬리말15 )

### ◇ 보고서 제출 방법

- 제 출 : 01. 2. 10(토)까지 e-mail로 제출
- ※ e-mail 주소 : **js25@chollian.net**

[ 서식 1 ] 1단계 대책 관련 부처(5) : 건설교통부, 환경부, 국세청, 경찰청, 식품의약품안전청

# 行政透明性 提高를 위한 制度改革 方案

( ○ ○ ○ 부 )

## 1. 推進 實績 評價

### ☐ 총 평

○

—

- \* 소관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상황 (완료, 정상추진, 부진)을 정리

### ☐ 잘된 사항

○

—

- \* 잘된 사항은 여론조사 결과,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리

### ☐ 보완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

○

—

- \* 보완해야 할 사항에는 과제 추진상 미진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부진한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, 1단계 대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거나,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그 부패실태·원인 등을 정리하고 추가해야 할 사항 제시

## 2. 補完・追加對策

### ☐ 기본 추진방향

○

—

### ☐ 보완 대책

○

—

- \* 1단계 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하여 과제별 보완대책 제시

### ☐ 추가 대책

○

—

- \* 대통령 지시사항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에 대한 대책 제시

## 3. 推進 計劃 및 日程

☐

○

—



※ 실천과제 목록

○ 총 과제수 :        건 ( 기존과제        건, 신규과제        건 )

연번	과제명	주요 조치사항	조치기한	비 고
1	000	- 000 - 000	기추진	1단계 (계속추진)
2	000	- 000 - 000	00년도 1/0분기한	자체발굴 (신규)
*				

\* 작성 요령

- 연번 : 과제별 연번을 기입 ( 1단계 과제, 자체 발굴 과제 순으로)
- 과제명 : 과제명을 기입, 1단계 대책 과제는 기존 과제명을 사용
- 주요조치사항 : 기추진한 사항을 1~2줄로 요약하여 정리하고, 앞으로 조치할 사항을 명기
- 조치기한 : 00년도 0분기한으로 명기
- 비고 : 1단계 대책 과제인지 추가로 발굴한 과제인지를 구분하여 각각 ‘1단계’, ‘자체발굴’로 나누어 명기하고, 1단계 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추진, 변경, 보완 여부를, 기존에 추진중인 사항을 일부 개선하는 것인지(개선), 신규로 추진되는 것인지(신규)를 같이 명기

※ 완료된 과제의 경우는 연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(연번란에 \* 표시) 과제명을 명기하고 주요 조치사항란에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 사유를 기재

[ 서식 2 ] 2단계 대책 관련부처(6) : 교육인적자원부, 행정자치부,  
보건복지부, 기획예산처, 조달청, 중소기업청

## 行政透明性 提高를 위한 制度改革 方案 ( ○ ○ ○ 부 )

### 1. 腐敗實態 및 原因

□

○

—

\* 취약분야별로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부패실태 및 원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

### 2. 基本 推進方向

□

○

—

\* 2단계 대책(안)에 포함된 과제 및 신규로 발굴한 과제 전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점 방향 및 전략 제시

### 3. 對策 方案

#### 3.1 총리실과 협의 · 확정된 2단계 과제



—

\* 2단계 대책(안)을 토대로 보완 · 발전시킨 대책내용 제시

#### 3.2 추가로 발굴한 과제



—

\* 추가 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토대로 자체  
적으로 발굴한 과제에 대한 대책 제시

### 4. 推進 計劃 및 日程



—

※ 실천과제 목록

○ 총 과제수:        건 (총리실 협의과제    건, 자체발굴과제    건)

연번	과제명	주요 조치사항	조치기한	비 고
1	000	법령개정 등	00년 1/0분기한	2단계 (신규)
2	000	운영개선 등	00년 1/0분기한	자체발굴 (개선)

\* 작성 요령

- 연번 : 과제별 연번을 기입 ( 2단계 과제, 자체발굴 과제 순으로 )
- 과제명 : 과제명을 기입
- 조치사항 : 법령개정, 기구 및 인력 보강, 지침개정 등 필요조치사항 기입
- 조치기한 : 00년도 0 분기한으로 명기
- 비고 : 2단계 대책 과제인지 추가로 발굴한 과제인지를 구분하여 각각 ‘2단계’, ‘자체발굴’로 나누어 명기하고, 기존에 추진중인 사항을 일부 개선하는 것인지(개선), 신규로 추진하는 것인지(신규)를 같이 명기

[ 서식 3 ]    관련부처 : 1, 2단계 대책 주무부처이외의 전부처

## 行政透明性 提高를 위한 制度改革 方案

( ○ ○ ○ 부 )

### 1. 腐敗實態 및 原因

□

○

-

\* 취약분야별로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부패실태 및 원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

### 2. 基本 推進方向

□

○

-

### 3. 對策 方案

□

○

-

\* 대통령 지시사항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에 대한 대책 제시

#### 4. 推進 計劃 및 日程



○

-

#### ※ 실천과제 목록

○ 총 과제수 : 건

연번	과제명	주요 조치사항	조치기한	비 고
1	000	법령개정 등	00년 1/0분기한	신규
2	000	- 기존 추진사항 - 운영개선 사항	00년 1/0분기한	개선

#### \* 작성 요령

- 연번 : 과제별 연번을 기입
- 과제명 : 과제명을 기입
- 주요 조치사항 : 법령개정, 기구신설, 인력보강, 지침개정 등 필요조치사항 기입
- 조치기한 : 00년도 0 분기한으로 명기
- 비고 : 기존에 추진중인 사항을 일부 개선하는 것인지(개선), 신규로 추진되는 것인지(신규)를 명기